

제 4 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제1절 남북 이산가족

제2절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제3절 인도적 지원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5절 북한인권문제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협력

남북간 인도분야는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북한 인권문제,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 인도분야의 협력은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주민의 분단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7천만 모두의 행복이 구현되는 「행복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산가족 분야에서는 2008년 중 당국차원의 상봉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중단없이 지속되었다. 7월에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완공되어 이산가족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2008.6.6), 국회 개원연설(2008.7.11)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강조한 만큼, 향후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북한에 제기할 예정이다. 전후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7년 제정된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족 피해위로금, 탈북 귀환 납북자 정착금이 지급되면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8년에는 당국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민간과 국제기구를 경유한 대북지원은 지속되었다.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남북협력기금 집행과정 및 대북지원 민간단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 이후 차관형식으로 제공되었던 쌀 지원이 2009년부터 인도적 지원의 취지에 부합되게 무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분배투명성 확보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또한 우리정부의 지원으로 유엔인구기금(UNFPA)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인구 및 주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말까지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말에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되면 다양한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 중 2,809명이 입국하여 총 국내입국 인원은 1만 5,057명에 이르렀다. 입국인원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하나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취업문제 해소를 위해 노동부, 기업 등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인권 문제는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에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제6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동시에 찬성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였다.

제1절 남북 이산가족

2007년 11월에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연간 대면상봉인원 400명, 분기별 화상상봉 40가족, 분기별 영상편지교환 30가족 등 상봉규모의 확대와 정례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색으로 인해 2008년 초에 성사된 영상편지 시범교환을 제외하고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남북은 2008년 2월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각각 20가족씩 미리 제작한 영상편지를 교환하였다. 영상편지 교환은 상봉행사를 통해 이미 가족을 상봉하였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감회와 현재 소식 등을 영상으로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상봉 후에도 교류를 지속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교환된 북한측 영상편지는 연락처 확인을 거쳐 곧바로 남한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확대와 상시상봉체제 실현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제의에 따라 남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2002.9)에서 최초로 금강산지역에 면회소를 설치하고 이후 경의선이 연결되면 서부지역 면회소 추가 설치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2003.11)에서는 우리측이 이산가족면회소를 전담하여 건설 및 관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5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2007년 12월 남북면회사무소 준공식에 이어 2008년 7월 12일 공사시작 2년 11개월만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완공하였다. 금강산 관광특구지역 내에 위치한 이산가족면회소는 연면적 19,835㎡로 지하1층·지상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동으로 구성되었다. 면회소동의 경우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이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 상봉행사의 경우, 우리측 가족들은 해금강호텔에서, 북한측 가

족들은 금강산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산가족면회소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들의 이동이 줄어들고 가족간 상봉시간이 길어져 이산가족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상시상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면회소 개소를 잠정 보류하고, 현재 위탁관리업체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대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상봉 규모의 확대, 상봉 프로그램의 다양화, 상봉횟수의 확대 등을 담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 합의서」를 북한과 협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차원의 상봉중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되었다. 2008년중 314건 375명에 이르는 이산가족들이 제3국을 통해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북한 가족과 교류하였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교류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남북협력기금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산가족 위로행사(2008.8.13, 서울)

정부는 또한 당국간 상봉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이북5도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13일 서울(통일교육원)을 시작으로 8월 29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가족을 상봉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을 위로하였다. 6월 3일부터 5일까지 지방거주 이산가족들을 찾아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지방순회설명회도 전주, 안동,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개최하였다. 특별히 80대 이상의 고령이산가족 3만 339명을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서신을 발송하여 상봉행사가 중단되어 이산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정부는 향후 이산가족 교류재개에 대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홈페이지(<http://reunion.unikorea.go.kr>)를 개편하였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메뉴와 디자인을 간결하게 하였고, 기존의 영상편지 동영상서비스와 이산가족정보의 실시간 확인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신청결과와 민원처리 결과를 이메일 및 SMS(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주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등록 현황

(2008년 12월 말 현재)

구 분	90세이상	89-80세	79-70세	69-60세	59세이하	계
인원수(명)	4,310	29,393	33,740	13,262	7,712	88,417
신청비율(%)	4.9	33.2	38.2	15.0	8.7	100

* 총 127,343명 등록(사망 38,926명, 생존 88,417명)

제2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6.25전쟁 휴전 이후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쟁포로를 상호 교환하였다. 당시 유엔군측은 국군 실종자의 수를 8만 2,000여 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공산군측으로부터 최종 인도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였다. 실종된 국군의 상당수는 송환되지 못한 채 북한에 강제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송환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한국전쟁의 전선범위, 성격 및 시간 경과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1994년 10월 조창호 소위의 탈북 귀환 이후 2008년까지 총 76명의 국군포로가 탈북 귀환하였고, 정부는 귀환한 국군포로와 탈북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 중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시 납북자 규모는 조사 시기와 주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952년과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피납자, 즉 전후 납북자는 1955년 대성호 이후 총 3,811명이다. 이중 3,310명(87%)은 납북 직후 1년 이내에 귀환되었으며, 7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9월 30일 납북피해자보상지원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길용호가 납북사건으로 추가 인정됨에 따른 납북자 명단조정 결과 2008년 말 현재 미귀환자는 494명으로 추정된다.

전시 납북자 관련 통계

구 분	출 처	인 원
서울시피해자명단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0)	2,438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2)	82,959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통계연감(1953)	84,532명
6.25사변피납치자명부	내무부 치안국(1954)	17,940명
실형사민등록자명단	대한적십자사(1956)	7,034명

전후 납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어부	KAL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납자	3,811	3,710	50	25	6	20
귀환자	3,317	3,270	39	—	—	8
미귀환자	494	440	11	25	6	12

1. 남북협의를 통한 해결노력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 포로의 경우 이미 정전협정에 따른 포로교환으로 종료된 문제이고, 납북자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북한과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제2차부터 2007년 제16차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11명의 국군포로와 14명의 납북자가 남한의 가족을 상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것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2.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시행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852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이후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사망과 상이의 피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탈북귀환 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 납북자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국무총리 소속의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에서는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 피해위로금, 보상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납북자문제 실태조사, 납북자가족의 권리침해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이 있으며, 대학교수, 법조인, 남북관계 전문가와 당연직

위원인 정부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법 시행 직후부터 피해위로금 신청 등 납북피해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2008년 말까지 총 239건에 이르렀다. 2008년 5월부터 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어 총 186건, 60억 2,600만원(피해위로금 183건, 정착금·주거지원금 3건)의 지급이 심의·의결되었다.

납북피해자 신청서 접수 현황

(단위 : 건)

합 계	피해위로금					정착금 주거지원금
	소계	어부	I-2정	KAL기	기타	
소계	239	207	6	6	13	7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단위 : 건)

구 분	신청	지원결정	지원액(천원)
합 계	239	186	6,026,279
피해위로금	232	183	5,473,310
정착금·주거지원금	7	3	552,969

위원회에서는 법률시행 등 정부의 납북자 지원정책을 적극 알리기 위해 납북자가족에게 안내서한을 발송하고, 납북자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정책설명회를 7회 개최하였다. 또한 납북자가족이 대부분 고령자 및 지방 거주자인 점을 고려하여 강원과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고령자 및 지방거주 납북가족들의 피해위로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또한 라디오, 신문,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신청 납북자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unikorea0>)를 개설(2008.3)하여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절차 안내, 각종 신청서 등 민원 서식을 게재하고 있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일자	위원회	위원회 결과
2007.11.30	제1차 위원회	위원장 호선, 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8.1.17	제2차 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분과위(2개) :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 납북피해산정 분과위
2008.2.13	제3차 위원회	납북피해자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인정
2008.4.17	제4차 위원회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 납북피해자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제정
2008.4.29	제5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30건, 95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51백만원
2008.5.30	제6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35건, 1,006백만원 위원회·2개분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8.6.30	제7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9건, 792백만원
2008.7.25	제8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5건, 784백만원
2008.9.30	제9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22건, 641백만원 납북피해자단체(납북자가족협의회) 사업비(7백만원) 지원결정
2008.10.30	제10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7건, 511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187백만원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등 산정과 지급에 관한 처리지침 개정
2008.11.27	제11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3건, 374백만원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결정 : 1건, 215백만원
2008.12.16	제12차 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결정 : 14건, 412백만원 납북피해자단체 사업비 집행지침 개정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주요 활동

구 분	지역 및 수단	회 수	참여인원(명)	비 고
정책설명회	부 산	1회	33	납북자가족 및 관련기관
	강 원	3회	107	"
	전 북	1회	28	"
	경 남	2회	21	"
이동민원실	강 원	1회	57	"
	경 남	1회	14	"
정책 홍보	관 보 홈페이지 일 간 지 카페 운영	1회 22개 기관 3회 연중		2008년 10월 10일 6개 부처, 16개 지자체 조선·중앙·동아일보 http://cafe.daum.net/unikorea0

또한 납북자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생계 곤란자, 고령자에게 연 말 연시 또는 명절에 쌀과 생필품, 소정의 격려금을 지원하고, 의료지원이 필요한 납북자가족에게는 사단법인 ‘사랑담는 사람들’과 동해시 소재 동인병원과 함께 생계,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민원 현장



의료지원

제3절 인도적 지원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집행투명성 제고, 민간 대북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 대북지원 분배투명성 향상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에 실시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2차례 개정(2008.6, 2008.11)하였다. 2009년도 기금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차관방식으로 제공해왔던 식량지원을 본래 인도적 지원 취지에 맞추어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대북지원시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옥수수 5만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으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민족적 동질감 형성에도 기여해왔다. 대북지원 초기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 위주에서 최근에는 기술전수나 자립·자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발지원성 사업들도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 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들로 다양화·전문화 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통행인원 제한조치로 예년에 비해 지원사업의 환경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지원은 꾸준하게 지속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농업생산성 개선, 보건의료체계 복구, 어린이·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왔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원이 시급하며 분배투명성이 확보된 사업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었다. 정부는 2008년에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 정책사업, 합동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62억원을 지원하였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정부는 2000년 7개 단체에 33억 8,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7개 단체, 40개 사업에 100억 6,000만원의 남북협력기

금을 지원하였다. 이는 42개 단체, 44개 사업에 117억원을 지원했던 2007년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된 규모이다. 대북지원 분야도 식량, 의류, 생활필수품 등 일회성 긴급구호 차원에서 점차 의료시설 개보수, 주택개량, 농촌지역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다. 민간단체의 지원품목도 의약품, 영농자재, 묘목, 가축사육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사료공장 원료 지원, 채소농장, 농업기술 지원, 아궁이 개량, 조림사업 등에 지원하였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현대화, 의약품 지원, 의료장비 지원, 결핵퇴치사업 등에 기금이 지원되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인 어린이, 유아 등의 영양개선을 위해 어린이 급식사업(밀가루, 빵, 국수, 콩우유 등), 어린이 교육기자재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재배기술 전수, 공동의료시설, 제약공장 기술전수 등 전문가들의 교류도 진행되었다. 민간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북한측의 육로 통행 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방북인원 9,898명의 45% 수준인 4,47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8년 민간단체 개별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내 용	지원액
농업환경	식량증산 농업개발사업(월드비전) 등 15개 사업	3,096
보건의료	어린이 보건의료사업 (남북어린이어깨동무) 등 12개 사업	3,034
사회복지	취약계층 종합지원사업(등대복지회) 등 13개 사업	3,934
합계	37개 단체 40개 사업	10,064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기금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배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북지원물자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매칭비율을 기존에 정부 70%, 민간 30%에서 정부와 민간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단체의 집행증빙 강화 등의 조치도 취하였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통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개별사업이 일회성 일반 구호 중심의 지원에서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이상 민간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개발지원성 사업을 진행하는 합동사업을 2005년부터 지원해 왔으며, 2008년에는 대북지원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선정하여 18억 800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 민간단체 합동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관단체	사업내용	자체 재원	기금 지원	총사 업비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	남북나눔	농민주택 신축, 유치원, 탁아소, 보건소 물품 지원	1,413	1,413	2,826
종합검진· 검사센터 개설	나눔 인터내셔널	센터 공사자재 및 의료장비 지원 의료 기술전수	395	395	790
합 계			1,808	1,808	3,616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황해도 봉산군 천덕리 마을 개량사업으로 주택 신축, 유치원, 탁아소, 간이진료소 등에 생활필수품 지원, 유실수 조림, 양돈사료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종합검진·검사센터 개설사업은 평양에 검진·검사센터를 건설하여 평양과 지방 병원을 연계하여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다. 정책사업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파급효과가 큰 개발지원성 사업을 선정하여 전액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2007년에 도입하였다.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과 보건의로 인프라 구축, 농자재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북한산림녹화 시범사업, 북한의료인력 교육훈련 사업,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총 33억 6,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08년 민간단체 정책사업 기금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진단체	사업내용	지원액
결핵 관리 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결핵예방원 시설 개보수(1개소) 결핵 진단장비 및 소모품 지원 기술교육	1,000
의료인력 교육 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의료인 국외 및 평양 현지 교육 의료기기수리인력 교육	1,085
제약공장약품 생산 협력사업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원료약품 지원 기술(GMP) 교육	1,000
산림녹화 시범 사업	겨레의 숲	양묘장 조성(3개소), 종자보관관리시설(1개소) 산림병해충 방제 시범조림	1,250
합 계			4,335

2008년에도 정부는 북한 보건의로 환경 개선과 북한 산림복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중장기 사업인 북한 의료인력 교육사업, 제약공장 의약품 생산 협력사업과 산림녹화 시범사업 등은 계속 지원키로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결핵예방원 시설개보수, 진단장비지원, 기술교육을 위한 결핵관리사업에 각기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 43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다.

라. 북한 영유아 지원

정부는 북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이 통일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5년 북한 영유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2006년부터, 민간단체를 통해서서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남포산원 현대화), ‘남북어린이어깨동무’(남포 소아병원 현대화), ‘굿네이버스인터내셔널’(어린이 영양식 생산시설 건립), ‘어린이재단’(대안군 인민병원 현대화), ‘한국JTS’(회령 모자보건센터 신축 및 영양사업) 등 총 5개 민간단체 컨소시엄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2007년에 105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였으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이 이루어졌다. 남포산원(외래병동), 남포소아병원(입원병동), 대안군 인민병원(산과·소아과)의 의료시설 등은 2009년 중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 영유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월 7일에 한

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남포산원 등 병원 현대화 사업과 영양식 지원사업에 대해 자문을 하고 북한과의 협의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은 물론, 보건의료나 영양 등 관련 분야의 대북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의 대북지원 사업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1996년 이후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해왔다. 2008년에는 3개 국제기구의 북한 지원사업 4건에 대해 1,604만 달러의 지원을 결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말라리아 방제와 관련하여 120만 달러(질병관리본부지원액 제외), 북한 영유아 지원과 관련하여 1,02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말라리아 방제지원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연 1회, 북한 영유아사업의 경우 연 1~2회 세계보건기구와 남북한이 참석하는 평가회의가 개최되어 왔다. 2008년의 경우 말라리아 회의는 1월에 중국 상해에서, 영유아사업의 경우 3월에 중국 북경에서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하반기에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이유로 남한 정부인사가 참석하는 회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간 사업협의를 이루어지지 못했다. WHO의 영유아사업의 경우 2006년과 2007년 사

업평가를 위해 호주 멜버른 대학이 북한 현지를 방문(2008.4.8~22)하여 외부평가를 진행한 후, 세계보건기구의 영유아 지원사업이 북한의 보건의료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2008~2010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원의 전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실시되어 객관적인 사업평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는 영유아 지원을 위해 408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내용은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및 콜드체인(cold chain; 의약품 유통·운송시 냉장유통 체계) 구축사업, 영양사업, 식수위생 사업 등이다.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을 통해 북한은 BCG 등의 필수 예방접종에서 90%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최빈국 아동들에게 만연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IVI)를 통해, 2007년에 5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는 2008년 7월까지 일본뇌염 및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실 장비 등을 지원하고 북한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백신지원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백신연구 및 전염병 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위주의 사업조건을 부과하여, 2008년 11월 18일에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여 이중 19만 달러를 집행하고 30만 달러를 이월하였다.

한편, 세계식량기구(WFP)는 2008년 6월 북한 식량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북한 식량상황,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였으나, WFP를 통한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환율은 해당연도 기준 적용)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 달러(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 달러(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 달러(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 달러(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 달러(235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 달러(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334만 달러(240억원)
2007	옥수수 1,2만톤, 콩 1,2만톤, 밀 5천톤, 밀가루 2천톤, 분유 1천톤	2,000만 달러(190억원)
계	543,950톤	12,770만 달러(1,434억원)

② WHO(말라리아, 영유아, 긴급 의료지원)

연도	내역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 달러(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 달러(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 달러(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 달러(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구호세트	87만 달러(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 달러(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10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67만 달러)	1,167만 달러(116억원)
2007	말라리아 방역	138만 달러(12.9억원)
	영유아 지원(938만 달러), 홍역 지원(105만 달러)	1,043만 달러(98.9억원)
2008	말라리아 방역(120만 달러), 영유아 지원(1,027만 달러)	1,147만 달러(148억원)
계		3,904만 달러(423.1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내역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 달러(8억원)
1997	탈수방지제(ORS)공장, 분유781톤	394만 달러(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 달러(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 달러(10억원)
2006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230만 달러(23억원)
2007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315만 달러(29억원)
2008	영유아 지원(백신, 영양)	408만 달러(47억원)
계		1,697만 달러(170.4억원)

④ 기타 국제기구(기상자재, 농업 등)

연도	국제기구	내역	지원액
1996	WMO	기상자재	5만 달러(0.4억원)
1997	UNDP	지원	120만 달러(11억원)
	FAO	지원	30만 달러(3억원)
2007	IVI	백신, 의료교육	50만 달러(4.6억원)
2008	IVI	백신, 의료교육	19만 달러(2.5억원)
계			224만 달러(21.5억원)

3. 유엔인구기금(UNFPA) 북한 인구조사사업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별도로 정부는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사업을 지원하였다. UNFPA는 북한의 요청에 따라 북한 인구 총조사 실시를 위해 2007년 4월 1일, 북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의 기술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동 사업의 의의 및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2007년 6월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체계적인 사업지원 등을 위해 통일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인구조사, 북한경제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북한 인구총조사는 UNFPA에 의해 1994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 2008년이 두 번째로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현상 및 북한주민의 생활상 파악은 물론, 북한의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 남북경협 등 종합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NFPA는 인구조사를 위해 조사요원 교육 및 전문가 세미나와 예비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전역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조사에는 북한 전역에 걸쳐 3만 5,000명의 현장 조사요원과 7,500명의 지도요원, 북한 중앙통계기관 종사자 1,400명 등 총 4만 4,000명의 인구조사요원이 동원되었다. 인구조사시 조사요원이 호별방문을 통해 가족 수, 연령별 인구, 직업, 개인소득, 주택양식, 가구와 가전제품 목록 등을 조사하였다. 인구조사 질의서에는 나이, 성별, 결혼여부, 교육 정도, 국가내 이동, 장애 여부, 출생률, 사망률 등의 문항이, 주택조사 질의서에는 화장

실 유무, 난방과 상하수도 유무 등 총 5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현재 UNFPA 자문하에 자료분석 작업이 진행중이며, 2009년 12월 경 최종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UNFPA는 통계분석작업을 위해 북한 통계요원을 선발하여 컴퓨터 자료처리 방법, 각종 소프트웨어 취급법, 분석 기술 등을 훈련시키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분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이번 UNFPA의 북한 인구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파악해 중장기 남북관계 계획수립 등 종합대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4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08년 12월까지 총 1만 5,05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8년도에는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3 시행)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89 이전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남성	562	115	43	56	53	90	179	294	506	469	626	423	509	570	612	5,107
여성	45	12	13	30	18	58	133	289	632	812	960	1,268	1,509	1,974	2,197	9,950
합계	607	127	56	86	71	148	312	583	1,138	1,281	1,383	1,894	2,018	2,544	2,809	15,057

※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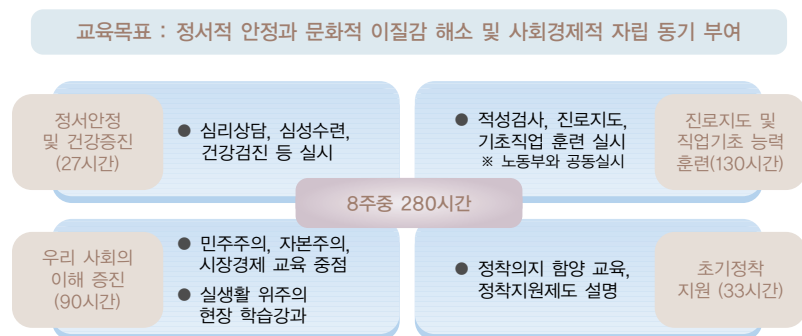
2008년에는 2007년 초에 개선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였다.

1. 사회적응교육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과 주거알선, 가족관계등록 창설, 정착금 등 우리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과 초기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시작된 시설증축이 2008년 12월에 준공됨으로써 적정 동시 수용능력이 300명에서 750명으로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8주간의 하나원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을 기르게 되며, 2009년 초부

터 사회적응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간을 12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경제적 자립에 중점을 두고 아래 <표>와 같이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 기간중 심리, 진로, 의료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심리상담실, 진로상담실, 하나의원(내과, 치과, 한방과, 정신과)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종교단체와 민간 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하나원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성별, 연령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원 분원을 설치하여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아동의 경우 하나원 인근에 있는 학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개원 이후 2008년 12월 현재까지 총 1만 3,479명이 하나원을 수료하였다.

2. 정착지원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통일정책의 맥락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우리 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정착장려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착지원의 목표는 단순한 수혜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있다.

가. 초기 정착금 지급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2008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 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이 정착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2,140만원으로, 장려금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착금 수혜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정착장려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
직업훈련 장려금	6~12개월	개월×20	
	1년 과정, 폴리텍대학, 우선선정 직종 수료	200	추가 지급
자격취득 장려금	직업훈련 장려금수혜자 중 자격취득자	200	
취업 장려금	1년~3년	450~550	
총액(최고액) 2,140			

2005년부터 도입된 정착장려금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 지급인원은 1,141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하였다. 이는 정착장려금 제도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정착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 만원, 명)

연도	종류	직업훈련	자격취득	우선선정 직종 등	취업	계
2006	지급액	13,480	8,400	600	600	23,080
	인원	112	42	3	3	160
2007	지급액	36,000	43,400	9,800	12,150	101,350
	인원	289	217	49	28	583
2008	지급액	62,940	69,040	18,800	89,100	239,880
	인원	500	346	94	201	1,141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을 특별히 더 보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는 동일인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한다.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연령 가산금	60세 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 등급	1,540(1급), 1,080(2~3급), 36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입원	개월×80
한부모가정아동 보호 가산금	한부모 아동	360

나. 주택 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대한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다. 취업 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3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와 노동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 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 '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노동부, 직업훈련기관, 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모집-훈련-채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2008년에는 제과·제빵 기능사, 조리사, 귀금속 디자인 과정 등이 개설되어 총 83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을 수료한 58명 중 44명이 협력 기업체에 취업하여 75.8%의 취업률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인의 직업훈련 후 취업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하나원과 남북 평화재단 및 대우차판매(주) 간의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관계(새터민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협약, 2007.10.23)는 2008년에 더욱 발전하여, 대우차판매(주)는 하반기에 북한이탈주민 23명을 정비사로 신규 채용하였다. 그리고 하나원은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과 협력하여 '메자닌아이팩'이라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선도적 협력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노동부 산하 전국 54개 종합고용지원센터에 55명의 전문적인 취업상담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와 하고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관심의 제고하기 위하여 11월에 통일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전국 7개 고용지원센터(서울남부·서울북부·경인·수원·대구·광주·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전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참가하여 346명이 면접을 보고 33명이 채용되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01	'02	'03	'04	'05	'06	'07	'08
업체수(개)	226	274	240	218	323	378	564	888
인원(명)	251	296	310	269	446	497	728	1,111
지급액(만원)	99,965	113,025	109,416	94,461	142,628	140,200	224,033	349,457

고용지원금 수혜 인원은 2004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전년대비 수혜인원이 53%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에 도입된 취업장려금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고용지원금은 기업체에 대해,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원에서 2007~200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423명 중 78.6%가 직원으로 채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성실성과 책임감이 높다고 답하였고, 72.3%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고용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94.9%를 차지하였다.

라.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교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할 때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인 5년 이내에 진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입국 인원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 입국 인원중 10대 청소년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입국한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모두 254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

마. 사회보장 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기준(최고액)

(단위 : 만원)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세대 기준	현금급여액
1인세대	38	4인 세대	105
2인세대	65	5인 세대	124
3인세대	85	6인 세대	143

바. 거주지 보호 및 민간을 통한 지원

거주지에 주택을 배정받아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은 정착도우미와 보호담당관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각 지역협의회, 지역 민간단체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초창기에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 1년 동안 지역사회를 안내하고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듣고 도와주는 '친근한 이웃'의 역할을 수행하며, 2008년 12월 현재 2,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앞에서 언급한 취업보호담당관 외에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2008년 현재 전국 211개 지자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

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지정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보호담당관과 지역사회 복지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생활 실태자료를 파악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4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에서도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심리상담, 청소년교육, 주민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협력사업을 지원하며, 60여 개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단체 및 보호시설 지원, 여성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정신건강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오랜 기간 상이한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진출 이후에 일정기간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원해주는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하나원을 수료한 신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실정에 맞는 '지역안내 및 취업·진학지원'을 목적으로 「지역적응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

이다. 「지역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제5절 북한인권 문제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북한의 인권실태 파악,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탈북자 지원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를 알리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북한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통일연구원과 협력하여 『북한인권백서』(국·영문)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민간단체가 발간하는 북한인권 관련 간행물의 배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들의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 유엔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민간과의 협력차원에서 정부는 민간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및 북한인권 관련 책자발간 등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나 전문가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한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주재국과 협의해왔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2008. 3.3)에서 우리정부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새정부의 기본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이 인권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직접 촉구한 것이다. 우리정부의 발언 이후 북한은 답변권 행사를 통해 “한국정부가 2000년 및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내용과 정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이러한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북한은 3월 6일 조선중앙통신 대변인을 통해 남한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으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망발”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제7차 인권이사회에서는 6월에 임기만료가 예정된 비티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연장결의안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우리 정부는 임기연장에 찬성하였으며, 투표결과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2009년 6월까지 1년간 연장되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개발 혜택의 불공정한 분배,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 차별,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불안정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 심각성, 여성·아동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불평등 대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면제 등 6개 세부 분야별 검토를 통해 인권침해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정부에 대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평가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권고를 위해 특별보고관의 방북 협조를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차원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중 4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으며, 최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부분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 6일에 서울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였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북한내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24일 ‘대결기도를 드러낸 불순한 인권소동’ 제하의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북한을 모해하기 위한 범죄적 책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및 우리입장

구분	UN 인권위원회			UN 인권 이사회	UN 총회			
년도	2003년 (59차)	2004년 (60차)	2005년 (61차)	2008년 (7차)	2005년 (60차)	2006년 (61차)	2007년 (62차)	2008년 (63차)
표결 결과	28:10:14 (찬:반:기권)	29:8:16	20:9:14	22:7:18	84:22:62	91:21:60	97:23:60	95:25:62
우리 입장	불참	기권	기권	찬성	기권	찬성	기권	공동제안 찬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을 때 투표에 불참하였고, 제60차(2004년), 제61차(2005년) 유엔인권위원회와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개최된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는 동시에,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개최된 제62차 유엔총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 및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우리정부는 기권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11월 21일 개최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

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역대 정부에서 취했던 입장에서 크게 나아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취하였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남북대화의 중요성, 북한내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적인 중단 촉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 협조, 인도적 기구의 접근 허용,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촉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북한은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시 박덕훈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를 통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하며, 결의안은 객관성을 상실한 정치적 사기”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2000.11.11)을 통해 “공동제안국 참여는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다.

2008년 제63차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요약

- 북한내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계속 거부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
- 외국인 납치와 관련 북한정부가 피랍자의 즉각 송환에 대한 보장을 포함, 적극적 해결을 요청
- 모성 및 유아 영양실조의 만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 북한정부의 예방적·구체적 조치를 촉구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그간 활동을 평가
- 북한정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
- 64차 총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